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확보를 위한 종교 · 시민 · 사회단체 간담회

◇ 일시 : 2001년 12월 27일 (목요일) 낮 3시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진행순서>

사회 : 박원석 국장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경과보고

모두 발언 1 : 오태양씨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현재적 의의

모두 발언 2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민간대체봉사제도 개괄

질의응답

토론

주최 :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참여연대, 청년통일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21세기진보학생연합,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생각하는 개인들

한국에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재

올 초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차마 총을 들 수 없다는 여호와증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한국 사회에는 또 하나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남북의 대치상황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안보 강화에 한 치의 의심도 허용되지 않았던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집총거부와 평화사상은 불온한 병역기피자의 낙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인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것에 무색하게 한국에서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그것이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만 제약을 받지 않을 뿐이지, 양심이 소극적으로건 적극적으로건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어 이들 거부자들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 한국에서는 매년 500명 이상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교도소로 향하고 있으며 1600여 명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징병제가 도입된 이래 50년 이상 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건 헌법에서도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이것이 국가권력화 사회문화적 폭력에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언제까지 이들의 양심을 철창 속에 가두어둘 생각인가?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천되어야 할 일이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

- 현재 대략 1,600여명 정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 복역중임.
- 일제 식민지하에서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간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가간 전과자는 1만 여명에 달함.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규정하는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여호와증인 신도들이며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 등 소수 존재함.
- 80년대 군의 민주화와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군대를 이탈했던 양심선언자, 전방입소거부자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포함될 수 있음.
- 현재 일반적으로 형기의 80% 이상 복역시 가석방. (군복부기간보다 1개월 추가하여 약 27개월 복역 후 가석방 추세)
- 군형법 44조(항명죄)의 최고형이 3년인데 최고형 3년을 일률적으로 선고.
- 입영 자체를 거부하여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시 병역법 88조 입영기피죄 위반자로 1년 6월 내지 2년 선고됨.
- 교도소 내에서 여호와증인들의 종교활동을 허용치 않고 있음.
- 입영 후 항명죄로 처벌받던 것에서 현재 대부분의 여호와 증인들은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에 의한 처벌을 받고 있음.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만 병역의 면제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법정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을 징역 1년 6월 이상의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헤프닝도 벌어졌음.
- 변호인단 구성 이후 항명죄로 처벌받은 거부자들이 집단항소를 제기했고 이 중 아버지나 형제 중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부자들에 한해서 6개월 감형됨.
- 양심에 따라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 형법상의 항명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됨.
- 지난 17일 오태양씨의 거부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감.

2. 경과

- 2000년 7월 대만의 대체봉사제도 도입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몇몇 사회단체들이 군문제의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
- 2001년 초, 한겨레21에서의 기사화 이후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여호와증인의 문제가 이슈화됨.
- 3월 17,8일 5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진행. 비공개 활동가 워크샵.
- 워크샵이 끝나고 며칠 후 징병제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3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에 들어감. 운영자들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지는 않음. 인터넷 검열에 반대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응에 들어갔고 이후 보다 대중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공론화 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해 5월 31일 공개워크숍을 위한 준비모임 구성.

- 5월 초,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여호와증인들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하여 법률지원 시작. 현재 입영기피죄에 대한 헌법소원 준비중.

- 5월 15일, 변호인단이 변론을 맡은 첫 군사재판.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기도 했으나 결국 3년형이 선고되었고 이후 모든 군사재판에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3년형이 구형됨.

- 5월 31일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 진행. 100여명 참석.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89년 양심선언자가 참석하여 증언.

- 6월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대체봉사제도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이단에 대한 특혜입법이라는 내용의 성명발표.

- 민주당 천정배, 장영달 의원을 중심으로 대체봉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6월로 이 문제를 입안하기 위한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청회가 7월로 연기되고 이후 결국 무산됨.

- 7월 8일, 대만대체봉사제도 참관을 위한 한국 참관단이 대만 방문.

- 8월 2일, 대만대체봉사제도 참관에 관한 보고회 개최.

- 9월 27일~30일, WRI 연례 세미나 참석. 한국의 상황을 국제무대에서 발언.

- 10월 13일, 인권운동사랑방 월례포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말한다'

- 10월 24일, 국제엠네스티 한국방문. 한국상황을 알림.

- 11월 17일, 참여사회연구소 제23회 정책포럼 '대체복무제, 그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에 대한 전망'

- 11월 26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접수.

- 12월 10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공익인권법 연구센터 주최한 '소수자의 인권-양심적 병역거부' 토론회.

- 12월 17일, 오태양씨 병역거부선언.

- 5월 공개워크숍 이후 워크숍을 준비했던 사회단체와 개인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형태의 모임을 가져 나가면서 탄원서 접수, 단체별 간담회, 입영을 앞둔 개인들에 대한 상담 등의 사업을 벌임. 내년 유엔 인권 위에서의 활동을 계획중이고 인권위의 '종교적 불관용에 대한 특별보고관',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에 제출할 개인청원 준비중.

- 현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은 각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아 나가는 작업, 피해자 지원, 입법 활동 등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연대모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

- 현재 한국의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단인 여호와증인에 대한 특혜라는 시각으로 거세가 항의하고 있으며 특히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시민들이 전통적인 국가안보주의의 시각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이후 ‘열흘 동안’

12/27. 오테양

내가 서 있는 곳

12월 17일 국가인권위에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선언한 지 꼬박 열흘, 제가 현재 서 있는 자리는 이렇습니다.

한편에선 ‘불교신자 최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또는 ‘비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최초의 군입대거부자’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처님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병역기피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국가적 범법자’라고도 합니다.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모두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부처님 아니었으면 이런 결정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의심할 나위 없이 한결같은 국민들의 사고가 서서히 여러 갈래로 갈라지니 국론분열. 그 말도 맞는 셈이죠. 종교계 내에서도 자근자근 회자되어 가는 듯 하고, 대다수 예비역들은 치를 떨며 분개하지만 몇몇 예비역들은 조용히 격려와 지지의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지극히도 평범하고 인간적인 제 종교적 신념과 인생관에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명백히 현행범법자이기도 하고,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로서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는 측면이 있으니 사회적 피해자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가만두지 않고 자꾸 ‘사회화’하려 돌아다니니 한 사람의 운동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현재 저의 위치입니다.

열흘간의 현황

17일 하루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기자간담회, 병무청상담, 아침을 여는 집(노숙자쉼터) 자원봉사 활동 상담, 일산 여호와의 증인 모임 참여로 보내고, 18일은 하루 종일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19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종교, 사회단체 관계자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50여 명 정도의 종교·사회단체 관계자 분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간 만남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공통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직접적으로는 단 한 분의 반대도 없이, 모두 지지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까지는 못되더라도, 사회적 관용의 차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며, 대체봉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둘째, 개인적인 입장과 소속단체의 입장을 분리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동의하고 지지하나, 종단이나 단체차원에서는 내부공유와 협의과정의 미흡, 단체 역량상의 부담, 연말연시의 조건 등을 이유로 당장의 지원이 어렵다거나 시간이 다소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견해가 많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셋째, 이 사안에 대한 원칙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보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다분히 원론적인 이해의 정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외국의 사례나

국제적 동향, 대체입법의 추진과정 등의 정보가 보다 풍부하게 소통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비로소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 하지만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격려와 비판들

17일 이후로 수많은 격려와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전화를 통해 100여분이 넘는 이들에게서 지지와 격려, 위로와 감사의 소식을 전해 받았습니다.

‘지금껏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군입대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였다.’

‘예비역으로서 내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일을 실행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군복무 문제에 대해 종교인들이 나서야 한다.’

‘소수자 인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제도의 개혁, 나아가 군사문화를 바꾸어 가야하는 계기로 삼자’ 등등의 긍정적 반응들이 그것이다.

반면에 직접 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의 각종 의견게시판(오마이뉴스, 한겨레토론방, 사이버 참여연대, 불교정보센터)에는 날카로운 비판의 글도 100여건이 넘는 듯 합니다.

‘양심이니 종교니 하는 것으로 포장하지 말고 병역기피자임을 인정하라’

‘한국은 유구한 호국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불살생 계율을 오도하지 말라’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전 국민의 병역의무는 필수적이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누가 군대를 가려 하겠는가? 소수자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그럼 군대간 사람들은 양심도 없다는 이야기냐? 용어부터가 문제가 있다.’ 등등...

그것이 지지의 글이든 비판과 비난의 글이든 모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이 사안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품어 안고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과제를 떠맡은 우리에게 좋은 토론거리를 제공해 주는 언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

왜적의 총칼에 쓰러져 가는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해, 의연히 승병을 일으켜 전쟁에 임하셨던 서산대사, 하지만 의로운 뜻과는 별개로 살생을 지지른 과거승으로서의 과보를 철저히 감내하셨던 서산대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전략)...이 일은 마치 모기가 무쇠로 된 소에게 덤벼드는 것 같아서 모기가 함부로 주둥이를 댈 수 없는 곳이지만 목숨을 내놓고 한 번 뚫어 보면 몸뚱이 채 들어갈 것이다“

오늘날 분단과 군사독재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뿌리내린 배타적인 집단주의와 일상화된 군사문화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한 개인의 선택은 매우 이단적이고 보잘 것 없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찍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었던 영국에서만도 6천 5백명, 미국에서만도

450여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을 간 후에야 이것이 인간적, 사회적 기본권으로 자리잡았던 지난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1만여명으로도 우리 사회가 이 작은 인간적 권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많은 젊은이들을 그 낡은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관행의 제물로 바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더 드러나기 전에 뜻 있는 제 종교·사회·시민단체 및 활동가들이 모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민간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국민적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로 승화시켜 갔으면 합니다.

모기 주둥이가 쇠를 몸뚱이 채 뚫고, 낙숫물이 결국에는 바위를 깨뜨리듯이 말입니다.

이후 사업 제안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정 및 대체봉사제도 도입 촉구 1차 선언'

: 대상 -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법조계, 학계, 정계

: 시기 - 2002년 1월

: 선언문 작성 → 각계의 대표적 인물 및 단체 접촉 → 각계 서명받기

2. '(가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확보를 위한 연대모임 발족'

: 시기 - 2002년 1월

: 발족식 및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 개최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정 및 대체봉사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

: 매주 혹은 2주에 한번씩 거리서명

: 단체별 서명조직 / 대학생 서명 조직

4. '(가칭) 양심을 나누는 사람들' 조직 - 병역거부자 지원

: 홈페이지 혹은 여타의 방식으로 회원 조직

: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편지보내기 운동 및 석방캠페인

5. 사법적 대응

: 변론지원

: 헌법소원 및 가석방 촉구

: 재판방청

6. 국가인권위 진정

7. 국제연대 및 유엔인권위 제소

8. 언론홍보

: 언론사 기자 간담회 개최 - 일간·주간·월간지별 기획기사 요청

9. 국방부 및 한기총 등 반대세력 대응

10. 토론회 조직

: 방송토론회 / 국방부 포함하는 대규모 토론회 / 국제심포지엄 모색

<연대모임 조직구성>

: 위와 같은 사업들을 총괄하는 조직체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소책자 발간

: 거부자들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

: 홈페이지 제작

: 구성 : 개인 및 단체

1. 상임(혹은 공동) 대표 및 자문위원단

2. 집행위원회 : 대외조직·홍보 / 회원조직 담당 / 토론조직 담당 / 대변인 / 국제연대 담당 / 사법대응 담당 / 입법을 위한 연구그룹 / 회의소집 및 연락담당(집행위원장)

3. 회원조직 : 피해자·시민·대학생 참여